

전망기획(4) 2012년 한국경제

#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

2012.01.09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 목 차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2. 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
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
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



<http://saesayon.org>

##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2012년을 전망하면서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취약한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sup>1)</sup>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국면은 많지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위협에 빠졌지만 수출 호조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난국을 탈출할 수 있었고 2003년 카드대란이 불러온 심각한 내수 침체도 수출로 만회했다. 그러나 2009년에 이어 2012년 올해에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약화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도 있지만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을 내부에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9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수출이 약 5500억 달러, 수입이 5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수립한 후 50여년을 지속적으로 수출에 목을 매고 경제성장을 해온 결과인 셈이니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다음은 2조 달러’라는 식의 목표를 성급히 세우기 전에 돌아볼 것이 있다. 먼저 우리의 무역 규모가 세계 9인데 비해 경제규모는 15위라는 점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래 [그림1]을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sup>2)</sup>는 90~100% 안팎으로 대단히 높다. 일본에 비해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로 성장하고 있어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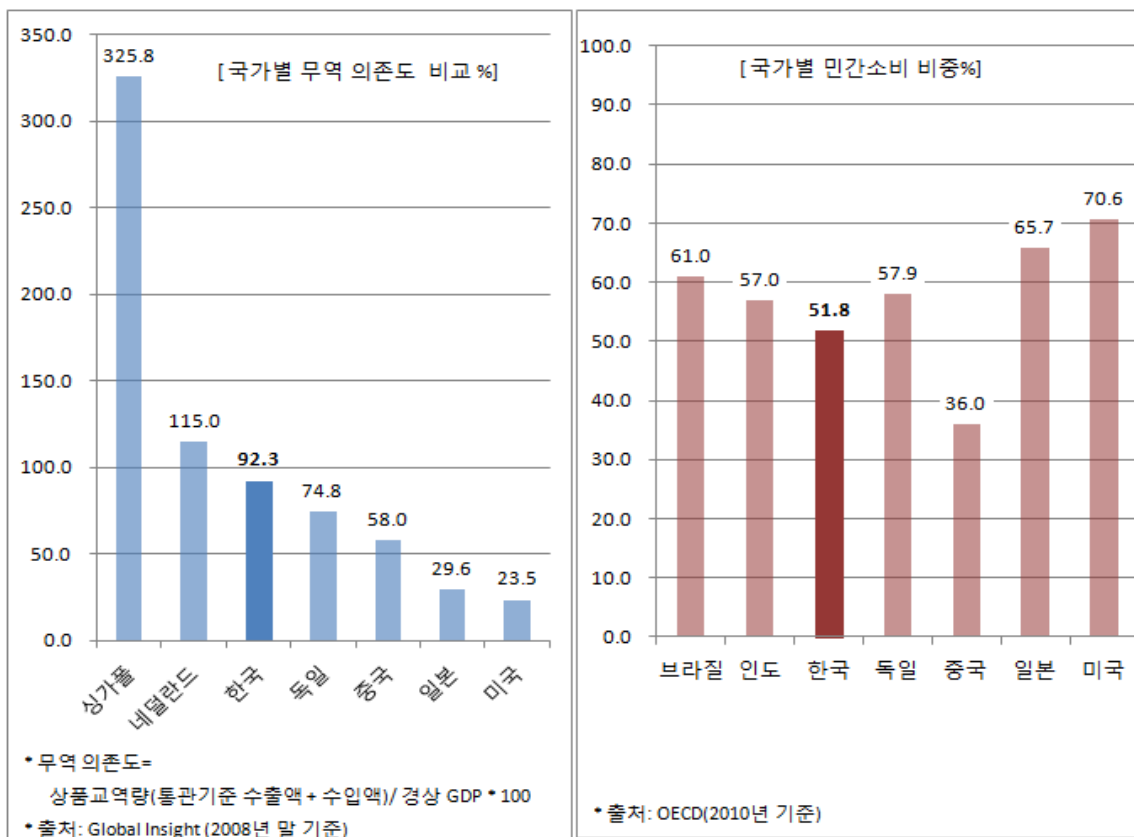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08년 이후 더욱 높아졌는데, 2007년까지만 해도 70% 미만이었던 무역의존도가 최근 100% 가깝게 올라갔다. 반면 전통적인 수출 지향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무역 의존도가 약간씩 줄었다. 중국의 경우 2010년 무역 의존도는 52%정도다. 물론 유럽 위기의 중심에 있는 독일은 오히려 무역 의존도가 늘어서 2010년 기준 약 87%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수 부족 공백을 채우기 위해 5년 안에 순 수출을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한 미국도 2010년 무역 의존도가 27%까지 올라갔다.

1) 정태인, 2012.01.06,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 (수출액+수입액)/GDP

독일을 제외하면 기존에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온 국가들은 무역 의존도를 다소나마 줄이면서 위기 완충을 해왔고, 반대로 미국처럼 내수 중심 국가들은 수출 폭을 늘려서 위기대처를 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국가이면서도 위기 국면에 수출 비중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택했다.

[그림1] 무역 의존도 민간소비 국제비교



한국전쟁의 잣더미 말고 아무것도 없던 한국경제가 50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하여 5천억 달러 이상의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고, 또 그 만큼의 물건을 밖에서 사다가 쓸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해외에 내다 팔기만 하느라 정작 50년이 지나도록 우리 자신이 운택하게 살게 위해 나라 안에서 소비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않다. 즉, 무역규모가 팽창하는 만큼 내수규모가 커지지는 않았다. [그림1]을 보면 우리 경제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은 52%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낮다.

결국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수출지향형 한국경제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상대적 격차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처음에는 자본과 기술, 시장 등 아무것도 없고 저임금 노동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추구해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고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내수기반이나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기반이 동반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미국과 같은 기존 내수지향형 국가들마저 수출에 뛰어 드는 등 수출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마찰이 갈수록 커지는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유지를 얼마나 더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올해 경제 전망에서는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수출이 5~7%정도로 줄어든 것이라고만 예측할 뿐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가져올 충격과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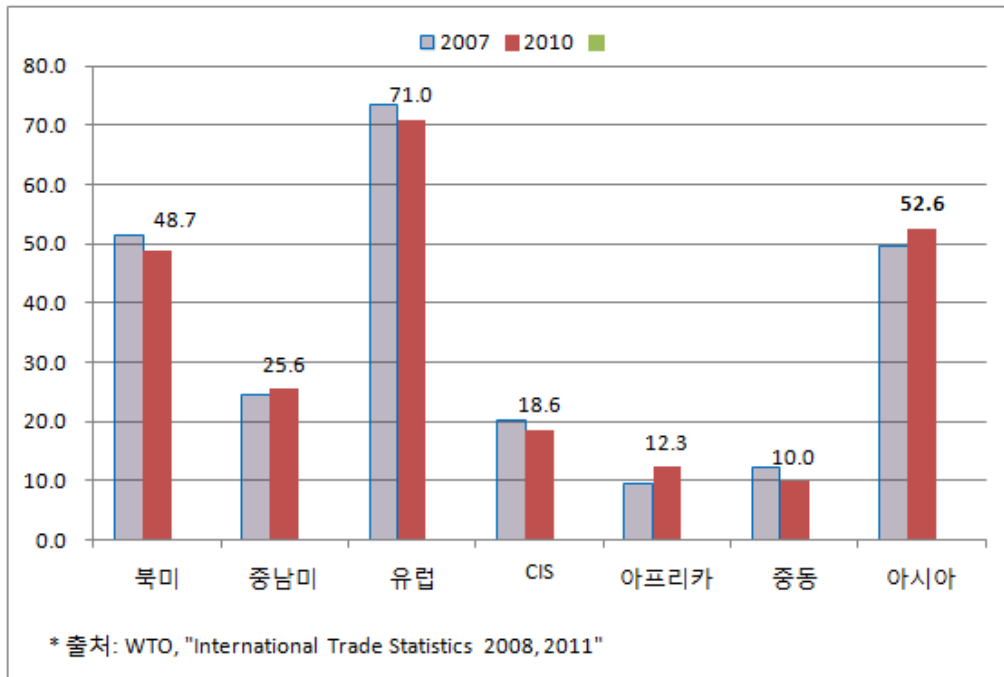
## 2. 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2011년 연말에 있었던 주목할 무역 환경 변화는 바로 한미 FTA타결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면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활발한 상품, 서비스 무역 거래가 촉진되고 한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홍보와 달리 당장 2012년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가 확실한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무역거래가 활발해질 리는 없다.

2011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19%를 넘어갔지만 2012년에는 한국경제가 잘 해야 7% 전후의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세계 무역이 올해 5% 정도 늘어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은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평균 증가율 이하를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과 아시아 수출이 두 자리를 지속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럽 위기의 악화로 중국과 아시아 경제 둔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수출 증가율 목표 5%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3.7%는 무너지게 된다.

[그림2] 세계 무역에서 각 지역의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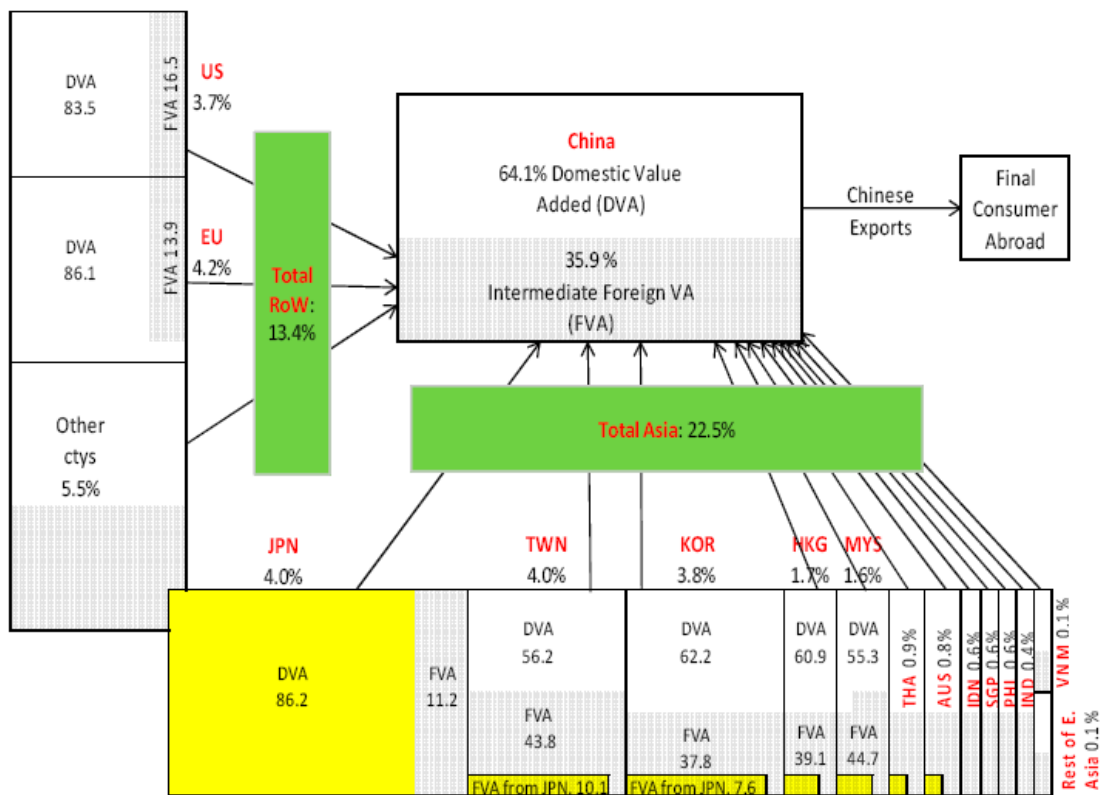


또 하나 명확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단한 무역 의존도는 지금 FTA를 맺은 북미나 유럽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지금 북미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등 적어도 3개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지역 경제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에게 이 틀이 매우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그림2] 참조).

특히 NAFTA라는 강력한 FTA로 엮여 있는 북미 경제권과, 통화동맹으로 엮힌 유럽지역과 달리, ASEAN+3, ASEAN+6 등 대단히 느슨한 협력 테이블 정도밖에 없는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무역 의존도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의미 있는 현상이다. 더구나 아시아의 역내 무역 의존도는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더 커져왔다. 한국의 경우라고 예외가 아니다. 코트라 전망에 의하면 2012년 한국경제의 수출 예상치는 약 6000억 달러인데, 이 중 중국권이 2000억 달러와 아시아 지역이 1120억 달러로 둘을 합치면 전체 수출 예상치의 절반이 넘는다. 반면 북미와 유럽을 모두 합친 수출 예상 금액은 1200억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 수출과 무역에서 FTA 효과를 운위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특히 [그림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산업생산 네트워크는 비교적 견고하게 구축되어왔다.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은 자본재와 소비재, 그리고 총수출이 모두 세계 1위이다. 한국경제는 중국을 축으로 한 공급사슬 가운데에서 일본, 대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향후 어떻게 전환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대외무역 형태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미 FTA나 한EU FTA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림3]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사슬



Source: Koopman et al. (2010),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Tracing Value Added in Global Production Chains," NBER WP 16426  
 Note: DVA refers to Domestic Value Added, while FVA refers to intermediate Foreign Value Added.

### 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를 물론이고 세계 소비시장 국가인 미국까지 앞장서서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로 망가진 내수시장을 대체할 외수시장, 즉 수출시장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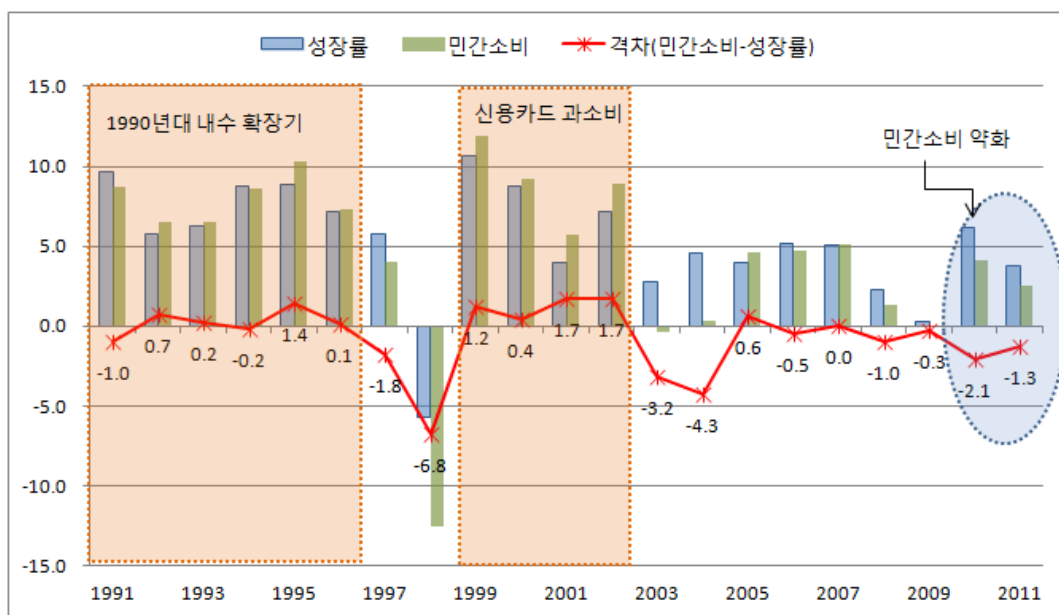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환율인하 경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국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수출 의존도가 크고 무역수지 흑자가 컸던 독일, 일본,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한 경계와 비난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오랜 동안 항상 당위적인 명제일 뿐이었던 내수 기반 강화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매우 절박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올해 ‘내수 살리기 백가쟁명’의 정치구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내수를 이루는 중요 요소로는 기업 투자나 정부소비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민간 소비 측면에서 들여다 보기로 하자.

일단 우리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3.1% 증가하여 지난해의 2.5%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수출 부진을 상당부분 민간소비가 받쳐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우리 경제에서 내수 확장에 의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전반기 정도이다([그림4] 참조). 그 시기 외에 민간소비가 성장률을 추월했던 시기는 카드대출 남발이 횡행했던 1999~2002년 정도였다. 나머지 시기는 모두 민간소비가 성장률을 밀돌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림4] 실질 경제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사이의 관계추이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 자료 : 한국은행

그나마 지금까지의 취약한 민간소비 능력조차도 상당부분은 노동자의 실제소득이 아니라 금융대출과 부채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그림5] 참조). 빚을 얻어 소비를 하는 일종의 ‘적자 호황’이 이어진 것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적자호황의 붕괴를 의미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은 물론 한국 역시 더 이상 빚으로 소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현재의 내수기반 약화는 바로 이런 적자호황 붕괴로 나온 결과로 보아야하는 것이지만 단지 물가 상승률이나 소비심리 따위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 소득에 비해 너무 과도한 소비를 한 것이 문제인가?3)**

이 질문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이자 전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한다. “너무 많은 빚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적은 소득이 문제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을 비난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게 대출을 남발한 은행을 나무랐다. 어떤 이들은 자기네 물건을 수입 하랍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많은 돈을 빌려준 외국 채권자들, 특히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소비한 것이 문제”라고 비난할 때, 라이시(Robert Reich)는 “진짜 문제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수입 이상으로 (부채를 얻어) 지출하고 소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수입이, 경제 성장에 따라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

결국 2012년 한국경제를 전망하면서 민간소비와 내수회복을 기대한다면 국민들의 소득개선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특히 [그림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0년 1분기를 정점으로 민간소비가 추세적 하락을 계속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율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동시에 [그림6]에서 보이듯이 저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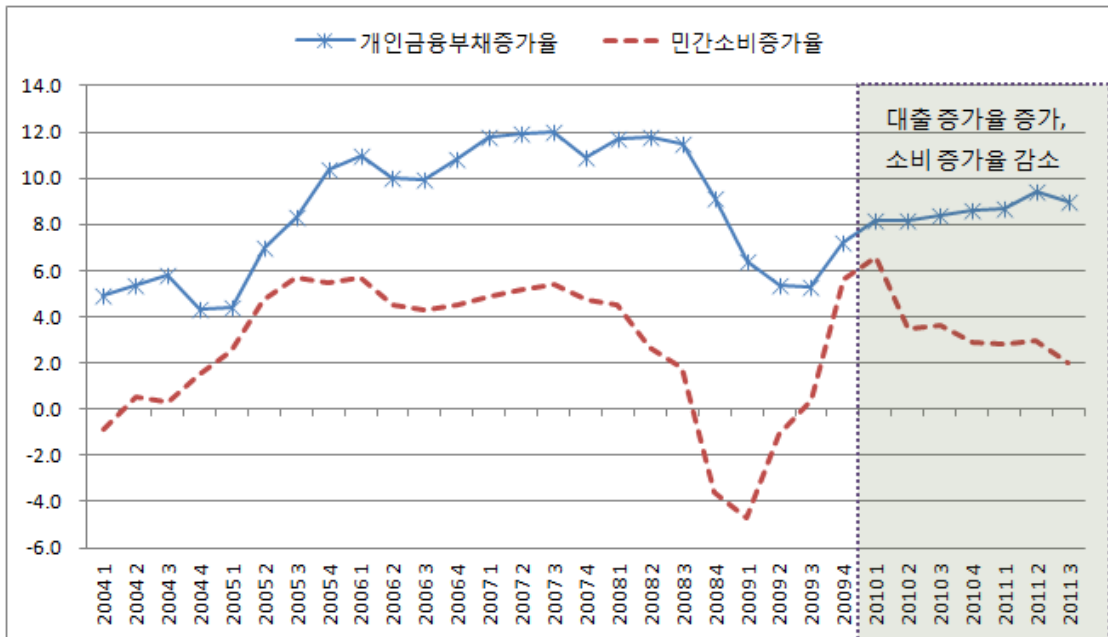
3) 로버트 라이시, 2010,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 Shock,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김영사



2009년 말을 정점으로 또 다시 줄어들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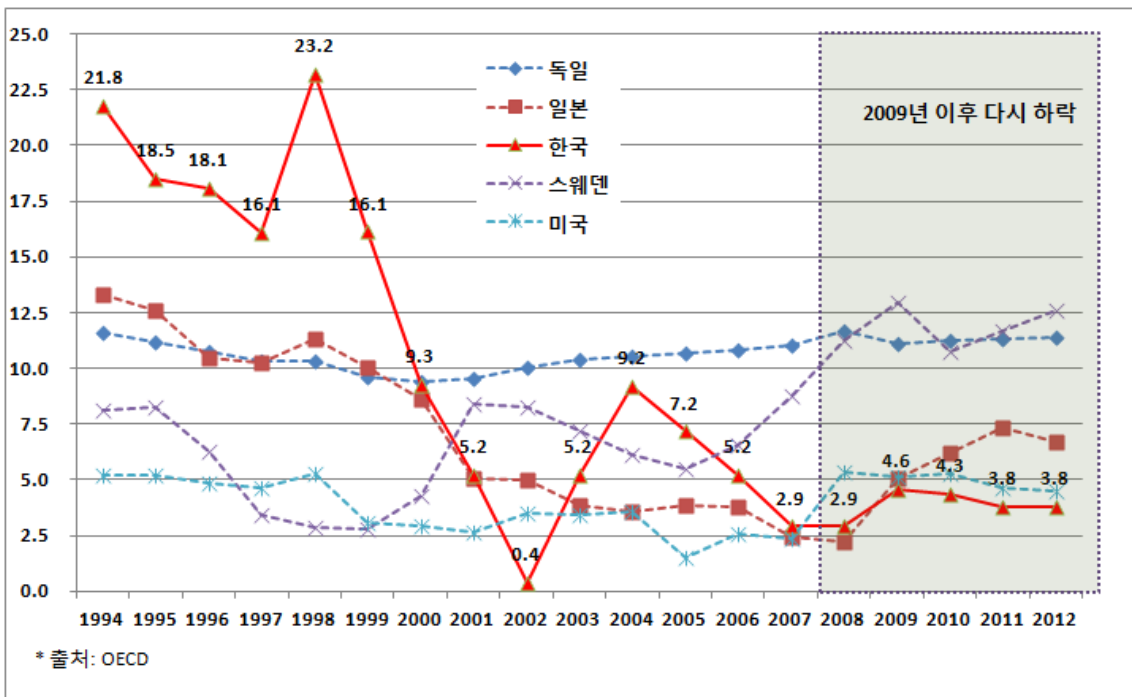
[그림5]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과 개인 부채 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 자료 : 한국은행

[그림6] 금융위기 이후 순 저축률 국제비교



\* 출처: OECD

부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못할 만큼 가계의 구매력은 약화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이 필요한 수준만큼 늘지 않았으며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99%의 분배 몫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빚으로 소비를 늘려왔지만 이는 1000억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봉착하면서 더 이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 규모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구매력을 약화시켜서 내수는 구조적 정체로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해서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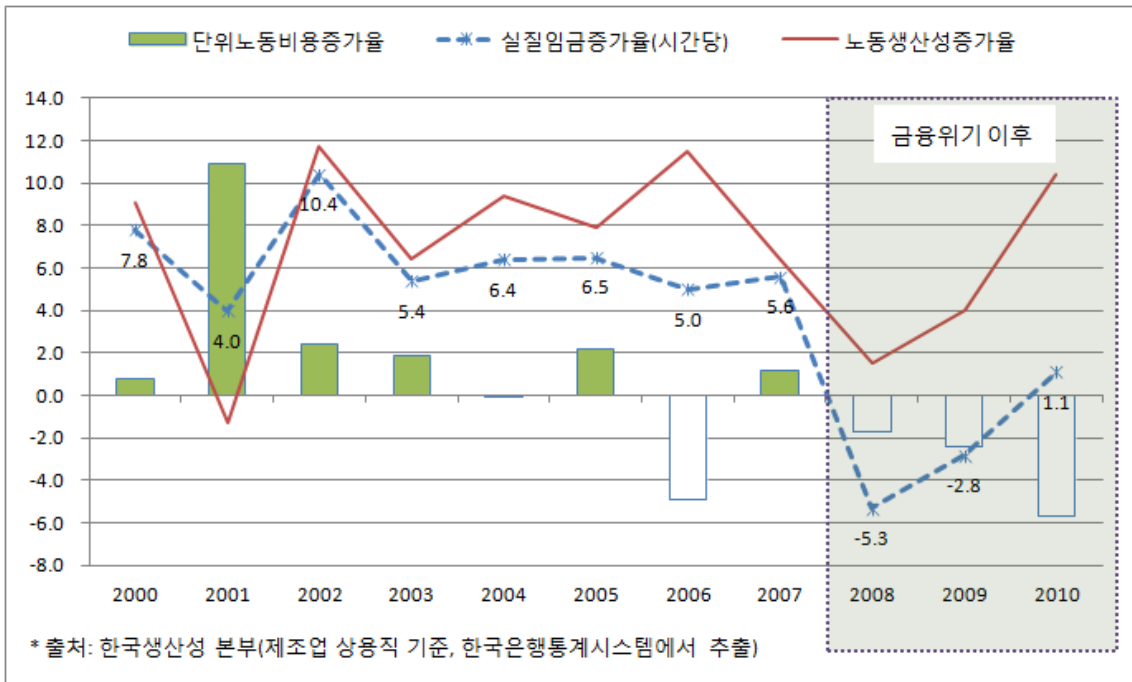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부채를 늘려 민간소비 위축을 막아보겠다는 임시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다. 가계 부채는 민간소비 부양을 상쇄할 정도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이다. 최근 미국의 버핏세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부자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자 증세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근원적인 해결책은 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중산층을 두텁게 재조직하는 것이다. 앞서 인용했던 라이시 교수는 1929년 대 공황이 가르쳐 준 핵심 교훈은 “소득분배가 적정 수준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경제 조직을 재구성해야 폭넓은 중산층이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교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미국 오바마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근원적 문제, 즉 대공황의 진짜 원인인 ‘불평등 심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 때문에 경기부양책과 통화량 증대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장기간의 고실업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라이시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일자리 양’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일자리를 얻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는 소득의 저하와 민간소비의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림7]에서 보듯이 한국의 실질임금은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에 크게 못 미치도록 하락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단위 노동비용도 계속 감소할

정도로 소득 보전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임금 격차가 적은 제조업 상용직이 이 정도다. 최근 일자리 팽창을 주도하고 있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은 매우 나쁜 보전 복지 서비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그림7]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



결론적으로 내수기반 강화 문제는 단순히 국내 상품시장 확대의 문제가 아니다.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구매력을 회복시켜야 하는 경제개혁의 문제다. 부자 증세, 임금차별 해소, 비정규직 축소, 복지 확대 등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시장 소득이 개선되고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대 선거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경제개혁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올해 성장률이 3%가 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외우내환의 타개는 수출 다변화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또는 물가안정에 의한 실질구매력 증대와 같은 단순한 거시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